



접촉은 많이, 투자는 신중하게

도 춘 호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북한부장

남북한 경협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정부가 북미(北美)제네바회담 합의를 계기로 핵문제와 경협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풀어놓자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이 본격화되고 있다. 쌍용 그룹의 투자조사단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시멘트 공장건설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정부로 부터 북한 방문 허가를 받은 삼성, 현대 등 나머지 기업들도 뒤따라 북한을 방문해 섬유, 봉제, 비료공장, 컬러TV, 음향기기공장, 금강산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합작사업이나 위탁가공 문제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새해에는 기업인들의 북한 러시현상이 생길것 같다. 너도 나도 북한을 방문해 경협문제를 논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협을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기업들의 생리로 볼때 그것이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중동건설 진출때도 그랬고 중국 등 사회주의권 진출때도 국내기업들의 과당경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

북한에서마저 그런 현상이 재연된다면 경협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경협을 추진하는 목적을 경제논리로 설명한다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싸면서도 질좋은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시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경협은 경제논리와 함께 엄청난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돼 있다. 그것은 민족문제 해결의 시작일 수도 있으며,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50년간 남북사이에 심화된 불신과 갈등 그리고 적대감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에 나서는 우리 기업인들의 사명은 막중한 것이다. 기업인들의 하나 하나의 행동은 바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남북간에 경협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거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들어가려 한다면 북한정권에게만 도움을 줄 뿐 실익도 없어지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점은 감상적인 우리 경제인들의 대북경협관(對北經協觀)이다. 우리기업들의 대북경협관은 일반적으로 민족공영론에 입각하고 있다. 경제논리보다는 우선 민족공영에 이바지하고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정서가 깃들여 있다.

어느 재벌그룹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내가 평생 섬유로 잔뼈가 굵었으니 더 늦기전에 북한에 있는 우리농포들에게 더 값싸고 질기고 고급스러운 의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만큼 보람있는 일은 없으리라. 나는 이러한 소망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 92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온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당시 한국신문 편집인 협회가 개최한 조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통일을 여는 역사적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 아래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순해

가 난다고 해도 크게 보면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리의 분단상황, 이산가족의 아픔, 어느 민족보다 정에 강한 우리민족의 정서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협의 단계는 그런 정서까지 포용하고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싹의 단계일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기업인 방북 허용을 밝히는데 이어 정부가 생활용품, 소규모 제조업 분야 등에 경협을 시범허용하는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북한의 노동당과 정무원의 대외 '입'역할을 맡고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업인 방북허용발표 3일 뒤인 지난 11월 10일 담화를 통해 듣기에도 거북스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정부를 비난하고 경협을 하려거든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하며 조문과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들은 상투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강한 멧세지를 담고 있다. 우리당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우리정부의 허가장을 가진 기업인들의 입북은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은 협력의 의미보다 우리기업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경협재개조치 발표전에 우리기업인들이 북경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북한관계자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로 북한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주었다는 소문은 자칫하면 북한의 농간에 우리기업인들이 놀아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다른 기업은 주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는 대단찮은 돈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남북간의 경협은 시작때부터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길고 우리가 바라는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기업인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협력이나 상호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없다. 북한에게 우리기업은 '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급한 것은 북한인데 우리 기업인들끼리 머리를 치고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만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남북경협의 선결과제이다. 따질 것은 따지고 명문화할 것은 분명하게 명문화해야지 대강대강하게 되면 손해만 보게 되고 불신만 쌓이게 된다. 그보다는 처음부터 분명하고 명확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분쟁과 말썽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도 50년동안 우리와 전혀 다른 정치체제에서 살아왔는데 외국인 투자관련법 등 몇개

의 관련 법률이 마련됐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릴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은 고사하고 기업간의 계약의 개념도, 생산성의 개념도 마인드화되어 있지 않는 그들과의 거래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우리기업들이 앞다투어 북한방문을 서두르는데는 '외국기업에 선점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제네바 북미합의로 새해부터 미국의 대북한통상·투자 완화조치가 실시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이 북한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미국의 AT&T, 모빌, 코카콜라 등도 새해들어 북한방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들 서방기업들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국내 연구기관들은 서방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원시적'이고 언어장벽이 많으며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유별나게 폐쇄적인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투자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해서 선뜻 응할리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기업들의 추세를 보가며 행동할 것이란 것이 이들 연구기관들의 지적이다. 실령 이들 서방기업들이 들어 간다고 해도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체질화되고 배타적인 북한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도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기업인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또다른 것은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다. 우선 북한 김정일체제의 안정성문제이다. 개방을 비롯한 북한의 정책방향은 어떤 속도와 폭으로 갈 것이며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이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반대세력이 없는가가 중요하다.

남북대화도 변수이다. 남북간에는 기본협 의서와 부속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효되고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4개 공동위원회와 정치, 군사, 협력교류분과 등 3개분과 위원회 및 핵 통제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72년 동서독의 기본조약이 체결됐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나 현실은 서로 얼굴이나마 맞댈 수 있는 대화통로도 없다. 새해에도 형식적인 접촉은 있을 지 모르

나 북한이 선전공세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다.

또 경협에 필수적인 투자보장협정이나 청산계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뒷문'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의 경협은 무엇보다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멘트, 석탄 등 관련 분야의 물자반출과 반입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합작투자를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접촉은 많이하되 투자와 실질 거래는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단계가 현재의 경협단계이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현재의 남북통로를 더욱 넓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鮑**

東向西答 북한말 기행

계획권과 근자嬢

> 이어 < →

